

동아시아 ‘시민’의 개념사와 동서양 비교연구의 쟁점들

정상호 지음,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한·중·일 3국에서 시민의 탄생과 분화』(에듀컨텐츠휴피아, 2022)를 읽고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시민과 시민사회 연구의 확대

한국의 사회과학에서 ‘시민’과 ‘시민사회’가 학문적 개념이자 연구대상으로서 폭넓게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였다. 물론 1970~1980년 대에도 철학, 역사학과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시민, 시민사회를 주제로 하는 논문과 저서들이 나오긴 했지만, 많은 학자가 한국 정치와 사회, 한국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규범적 토론을 시민, 시민성,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에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또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면서부터였다.

당시 학계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출판물은 1992년에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한울)였다. 그와 더불어 사회학자 유팔무와 김호기가 1990년대에 활발히 토론된 이 주제 분야 논문들을 모아 펴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한울, 1995), 이신행·장동진 등 정치학자들이 공동집필한 『시민사회운동』(법문사, 1999), 12명의 사회학자가 함께 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아르케, 2001) 등도 이 시기의 관심 대상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같은 연구 흐름이 이후에 지속되는 가운데, 2000년대에 와서는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연구대상 및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는 ‘비영리’, ‘제3섹터’,

‘NGO’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분석틀의 체계화 작업이 활발해졌다. 대표적 연구자들의 저작으로 주성수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이후 확대개정판으로 나온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한양대학교출판부, 2020), 박상필, 『NGO학: 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아르케, 2005), 유용원·박상필, 『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한울, 2012), 임현진·공석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진인진, 2016) 등이 있다.

사회과학자들에 의한 역사적 연구도 축적되어 왔는데, 그중 『한국 시민사회사』 3권짜리 저작집은 중요한 연구 성과였다. 이나미의 『한국 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정상호의 『한국 시민사회사: 산업화기 1961~1986』, 주성수의 『한국 시민사회사: 민주화기 1987~2017』(이상 학민사, 2017)로 이어지는 이 시리즈는 체계적 분석틀에 따라 해방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그와 더불어 개념사와 사회사를 결합시킨 연구들도 최근 이어졌다. 신진욱의 『시민』(책세상, 2008), 박명규의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소화, 2009), 송호근의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 변동』(민음사, 2011)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민음사, 2013) 등이 그런 예다.

세계적·초국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었다. 이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헬무트 안하이어, 메어리 칼도어, 말리스 글라시우스의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조효제·진영중 옮김, 아르케, 2004)이 번역되었고, 임현진의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 이론과 실제』(나남출판, 2012), 임현진·공석기의 『글로벌 NGOs』(나남출판, 2011), 박재창의 『지구시민사회와 한국 NGO』(오름, 2006), 박은홍 등 사회과학자 9명이 쓴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아르케, 2003), 박은홍·조효제의 대담집인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아르케, 2005) 등 아시아나 지구적 범위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II. ‘시민’의 탄생과 변화의 역사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맥락 위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해 온 정상호 서울대 교수가 동아시아 역사와 현황

을 비교한 새 연구서를 출간했다.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한·중·일 3국에서 시민의 탄생과 분화』(에듀컨텐츠휴피아, 2022, 이하 『동아시아 시민 개념』)가 그것이다. 이 책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동아시아 정치와 사회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여러 지식과 통찰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확장된 후속연구를 자극하는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현대 정치사와 사회사, 지성사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할 저작이다.

정상호 교수는 한국에서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사회적 범주의 탄생과 변화, 시민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시민사회 관계를 모색한 연구들을 일관성 있게 심화해 왔다. 그가 지난 20여 년 동안 발표해 온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정당, 민주주의, 거버넌스, 시민사회, 사회운동, 시민성, 공화주의 등의 주제들을 포괄하면서 제도·행위·이념을 다차원적으로 연결시키는 학문적 프로젝트를 진전시켜 왔음을 볼 수 있다.

꾸준한 연구 축적과 심화 과정은 그동안 출간된 단행본 저작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NGO를 넘어서: 이익정치의 이론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한올아카데미, 2006),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모티브북, 2011)가 각각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큰 문제의식을 체계화하였다면, 보다 최근에 출간된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한국 시민사회사: 산업화기(1961~1986)』(학민사, 2017)는 시민적 주체와 정체성, 시민사회 제도와 조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체계적 관점을 교차시킨 작품들이다.

특히 『시민의 탄생과 진화』와 『한국 시민사회사』는 시민·시민사회 연구의 개념적 명료성과 분석틀의 체계성을 더욱 높여서 이론, 구조, 역사를 다차원적으로 규명한 연구서다. 『시민의 탄생과 진화』에는 한국에서 '시민' 개념의 등장과 대중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이 개념의 변화와 분화 과정이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조선시대,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독재 시대, 광주항쟁, 6월 항쟁을 거쳐 민주화 이후 NGO의 급증, 촛불집회, 그리고 생활정치 전망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다.

『시민사회사』는 그 대상 시기가 군부독재 시대에 국한되어 있지만, 분석틀을 시민사회의 제도사, 조직사, 생활사, 이념사로 확대하고 더욱 체계화한 저작이

다. 제도사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제도를, 조직사에서는 재야단체, 인권·여성·환경단체, 노조, 교육·연구, 사회서비스 단체,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을 포함했으며, 생활사에서는 서명운동, 불매운동, 거부운동 등과 같이, 전문적 사회운동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집단행동 현상까지 관심을 확대했다. 한국의 시민 주체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 같은 저자의 선행연구들이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배경을 이룬다.

III. 동아시아 비교연구의 목표와 방법론

『시민의 탄생과 진화』에서 그 중점 연구대상 이외에 눈에 띄었던 점은, 한국의 시민 개념의 역사를 따라가는 긴 여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등장한 <보론>이었다. ‘동아시아 공민(公民) 개념의 비교 연구 서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 챕터는, ‘공민’ 개념의 국가 간 비교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 뒤에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의 공민 개념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이 글에는 시민, 국민, 인민, 공민, 대중, 군중 등과 같이 그 의미와 사회적 기능이 때론 중첩되고 때론 경합하는 일련의 인접 개념들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각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왔는지에 대한 강한 관심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한 관심이 구현되어 나온 이번 신작인 『동아시아 시민 개념』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시민’, ‘공민’, ‘인민’, ‘국민’ 등 키워드들의 역사를 비교 분석한 연구 성과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시민이나 시민사회가 아니라 아쉽게도 늘 국가와 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 시민과 시민사회를 다룬 연구들조차도 해당 지역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기준과 개념에 따라 개별 사례를 묶어 편집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에서 시민 개념을 체계적인 준거와 방법론을 통해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6쪽)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자는 두 이론적 접근을 도입하였다. 그 하나는 영국의 비판적 문화연구자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키워드(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Flamingo, 1976)에 담긴 관점으로

서, 그 주된 관심은 사람들의 일상적 소통에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핵심어들의 의미를 명료히 하는 것이다(Williams, 1976: 15). 다른 하나의 이론적 자원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오토 브루너(Otto Brunner), 베르너 콘체(Werner Conze),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d Koselleck)이 편찬해 낸 『역사적 기본개념(*Geschichtliche Grundbegriffe*)』(Klett-Cotta, 특히 '시민(Bürger)'이 수록된 책은 1972년에 출간)에서 왔다. 이 방대한 시리즈는 역사적·정치적 개념들의 명칭, 의미, 맥락, 중요 인물들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정상호 교수는 이번 저작에서 한중일 3국의 시민 개념과 시민사회의 역사를 4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기원'에 해당하는 1단계는 서구 근대문명의 도입과 근대화 이전의 시기로서, 중국은 남경조약(1842),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 한국은 강화도조약(1876)을 구분점으로 삼았다. '형성기'인 2단계는 근대화 개시 이후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화가 이뤄지는 한 세기다. 3단계는 '시민의 탄생'으로 명명된 시기로서 특별한 주목의 대상인데, 일본은 안보투쟁과 그 이후 주민·환경운동의 발전기인 1960-70년대, 한국은 1980년 광주항쟁 및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시기,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끝으로 4단계는 저자가 '시민의 분화'가 일어났다고 본 시기로,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대치, 일본은 55년 체제로 불리는 정치경제적 안정기의 종료 이후에 정치적·실용적 시민운동들의 분화,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V. 동아시아 3국에서 '시민'의 개념사

『동아시아의 시민 개념』은 시민 개념의 기원, 탄생, 분화라는 3개 역사적 단계별로 챕터로 나누어 한국, 중국, 일본 사례를 각각 비교하는 서술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3개 단계에서 정상호의 핵심 주장을 종합하여 한국, 중국, 일본 사례를 국가별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한국에서도 근대 이전에 시민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동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시민은 처음에는 주로 상인, 그다음에는 시가지의 거주민을 뜻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시민 개념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 전환점은, 서구의 시민과 시민사회 사상이 일본을 통해 도입된 193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 시기다. 저자는 해방 후부터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한국에서 상이한 의미를 갖는 시민 개념들 간에 경합이 지속되었다고 보고, 특히 4·19에 참여한 혁명적 시민과 5·16 쿠데타 이후 소시민의 모습 간의 대립, 그리고 독재체제 정립 후에는 관(官) 주도 시민과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 간의 대립을 그 예로 들었다(20-21쪽).

저자는 한국에서 “근대적 시민의 탄생”, “저항의 주체로서 시민의 탄생”, 또는 “서구의 시민혁명에 비견될 시민항쟁”이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까지 기간에 확대된 시민참여를 통해 처음으로 달성되었다고 해석한다. 1960년 4·19 때와 달리 저항행동의 참여주체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 언어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참여자들이 일반 시민들로 점점 확대되어 간 시기라는 것이다(48-51쪽). 마지막 단계로 “시민의 분화”는 2000년대 이후 ‘촛불집회’의 확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수 년간 계속된 ‘태극기 집회’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촛불집회를 시민참여 행동으로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저자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일어난 보수 시민들의 자생적 대규모 정치집회라는 의미를 부여했다(98쪽).

2. 중국

중국에서는 근대적인 정치적 의미의 시민 개념이 무술정변(1898)에서 5·4운동(1919)에 이르는 역사적 전환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 서구의 시민 개념을 번역하여 도입한 대표자는 강유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梁啓超)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저자가 주목한 점은 당시 중국에서 서구의 시민 개념의 번역어로 ‘공민’ 또는 ‘국민’을 사용하였으며, “국민의 진정한 의미를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도구적 유용성 차원에서 접근”(27쪽)했다는 사실이다(25~27쪽).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9년 5.4운동 이후엔 ‘계급’과 ‘인민’의 담론이 ‘시민’을 압도하였는데, 그때 ‘공민’이 정치적 주체의 개념으로 교육과정이나 담론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29~30쪽).

저자는 중국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탄생한 시점을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보았지만, 그 참여자들이 이후 망명하거나 침묵하였고 사회 전체의 보수화와 국가통제 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 개념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다(51쪽). 여기서 저자는 천안문 이후 다시 ‘공민’과 ‘인민’ 개념이 등장한 점을 주목한다. “서구식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원천적인 기피 심리”가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 빈번히 사용되는 ‘인민’과 ‘공민’이라는 “이 두 개념은 모두 현재 주권자로서 국가와 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당과 국가의 지도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존재의 의미가 강하다.”(107쪽)

3. 일본

일본은 조선이나 중국과 달리 근대 이전에 ‘시민’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메이지 유신과 근대화 개시 후에도 태평양전쟁 패전까지 자유롭게 독립적인 근대사회 주체로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저자는 그 원인이 천황제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는데, “국가 신도, 제국 헌법, 교육칙어로 완성된 국체론(國體論)은 천황을 일본의 심장이자 대가족의 수장으로 보는 유기체적·가족 국가관을 구축하였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복종과 멸사봉공하는 신민을 재생산하는 기제였다”(35쪽)는 것이다. 이 시기에 기피된 ‘시민’ 개념을 대신한 것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민’이었다고 한다. 이때 공민 개념은 “국민보다는 자립적이고 자치능력이 있는 주민을 뜻하는 것이었고, 공민교육 역시 ‘자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립적인 공민 또는 정촌 자치의 중심인물 양성에 주안점이 있었다.”(36쪽)

일본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의미의 시민 개념이 대중화되기 시

작한 계기를 저자는 1960년 안보투쟁과 그에 뒤이어 발전된 다양한 시민운동들에서 발견한다(68쪽). 안보투쟁은 “일본의 정치사에서 새로운 근대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저항하는 시민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매체들은 온통 시민, 시민의식, 시민정신 등의 말로 장식되었고 시민을 저항 주체로 보는 경향은 한마디로 ‘시민주의’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69쪽). 이후 일본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양심적 시민운동’의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범위에서 혁신자치체, 환경운동,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실용적 시민운동’이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으로 확대되었다(76-78쪽). 특히 ‘55년 체제’의 정치경제적 안정기가 끝나고 우경화와 국가주의, 민족주의 강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개혁적 시민‘운동’보다는 지역 범위의 주민자치를 추구하는 시민‘활동’이 대세가 되었다(115쪽).

V. 현대 한중일 시민사회의 제도와 구조

『동아시아의 시민 개념』을 읽는 독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시민’, ‘공민’, ‘국민’, ‘인민’ 개념의 긴 역사를 따라간 다음에, 2000년대 이후 최근 세 나라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시적인 현황과 제도적 환경을 비교 분석한 흥미로운 결과들과 만나게 된다. 그 출발점은 이른바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3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1998),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의 제정·시행 과정과 그 내용,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한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다양한 의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일반법이며, 이후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협동조합기본법」(2012) 등의 제정을 촉진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환경 변화는 2010년대에 비영리·공익 활동,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영역의 폭발적인 조직적 성장을 가능케 했다. 일본 역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제정 후에 한국과 유사하게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하는 대표적 제도로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기금회등기관리조례」, 「사회서비스기구관리조례」 등 3대 조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는 등기관리기관과 업무주관단위로 구성되는 ‘이중관리제도’를 통해 단체의 설립 준비, 심사, 허가, 감사 등 모든 과정을 규제한다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동일 분야에 사회단체를 복수로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비경쟁성’의 원리가 있어서, 정부가 관변단체를 먼저 설립하여 독립적 단체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통제 방식도 있다고 한다.

저자는 세 나라의 시민사회 제도 환경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보고 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핵심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시민단체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그 동인이었던 데 반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증가해 온 시민단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위로부터의 필요’가 동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면에서, 일본은 느슨한 인증 제를, 중국은 엄격한 허가제, 한국은 혼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일본은 불인증 비율은 낮지만 취소·해산율이 높은 데 반해 중국은 허가의 장벽이 높지만 허가된 단체들에 대한 감독은 느슨하다는 차이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제도 환경 위에서, 세 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된 활동 분야 및 단체 성격을 비교하여 특징지은 서술이 관심을 끈다. 저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사회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 중심 기능’의 단체와, 신념·가치의 ‘표출 중심 기능’의 단체로 구분하여 한중일 시민사회의 특성을 비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표출 우위’의 시민사회 유형에 해당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사회서비스 단체들이 양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서비스 우위’의 다원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유형의 시민사회는 지역 수준의 풍부한 사회자본과 결사체 네트워크가 장점이지만 공공정책과 정부를 비판·개혁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념을 형성할 애드보커시는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은 ‘표출 기능의 부재’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리(治理)’, 즉 한국과 일본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민관협력 모델이 정부에 의해 촉진되고 또한 크게 부상했다.

VI. 쟁점과 후속 과제

『동아시아의 시민 개념』은 이처럼 한국, 일본, 중국의 개념사를 그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최근의 시민사회 관련 제도 변화와 거시적 특성까지 면밀히 조사한 귀중한 연구다. 이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시민성과 시민사회를 초국적·비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고무할 것이며, 또한 한·중·일의 범위를 넘는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시민사회 비교 연구, 더 나아가 세계적 범위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한 후속 연구와 학술적 토론을 자극한다는 목적으로, 이 저작과는 어찌 면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생각거리를 제안해 보려 한다.

첫째, 역사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개념사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석틀과 방법론적 도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념사 연구에서 잘 알려진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의 『지나간 미래(*Vergangene Zukunft*)』(Suhrkamp, 1979)와 『시간의 층위들(*Zeitschichten*)』(Suhrkamp, 2000)은 의미사(Bedeutungsgeschichte), 명칭사(Bezeichnungsgeschichte), 실제사(Sachgeschichte)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어떤 개념용어의 의미의 변천(의미사),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명칭의 변천(명칭사), 개념들이 지시하는 사회현실의 변천(실제사)을 뜻한다. 『지나간 미래』의 121쪽을 보면 개념사 연구는 실제사의 맥락들에 대한 연구를 배경으로 하여 어의론적(semasiologisch) 연구와 명칭론적(onomasiologisch) 연구를 교차시키는 방법론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연구 또는 서술하고 있는 대상이 의미인지, 명칭인지, 실제인지 혼란스러워지면 체계적인 분석과 추론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시간의 층위들』 20-26쪽을 살펴보면 개념의 역사는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간단히 대체되는 과정이 아니라 역사과정에서 여러 개념과 의미가 중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의 지층’을 학문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의 시간 경험을 일회적 시간, 반복되는 시간, 세대를 초월하는 장기 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이 층위들의 특수한 중첩으로 개념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방법론적 고려를 통해 봤을 때, 국내의 개념사 연구

는 아직까지 학문적 엄격성과 체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학문적 진전을 위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조차 탄탄히 쌓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된다. 그런 방향으로 향후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둘째, '서구'와 구분되는 '동아시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종종 보이는 약점은, 비교대상인 '서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또는 서술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연구들은 '남의 것'인 서구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알면서, '우리 것'인 한국, 동아시아에 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거나 관심조차 없었다는 정당한 반성에서 출발할 때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남의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우리 것'의 특수성을 성급히 규정하는 것이다. 사과와 배를 비교해서 배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배와 사과를 모두 같은 깊이로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시민·시민사회 연구는 아직까지 '서구'에 대해서도,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처럼 엄밀한 동서양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서구'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의 자명성을 먼저 해체시켜야 한다. '서구의 근대화', '서구의 민주주의', '서구의 시민·시민계급·시민사회'를 말할 때 그 단일한 '서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링턴 무어는 1966년에 출간한 역작인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까치, 진덕규 옮김, 1990)에서 '서구'의 근대화와 민주화 모델로 알려진 경로에 부합하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으며, 미국조차 '근대 사회', '근대 정치', '근대적 시민권'이 지배적인 체제로서 정립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많은 '서구'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처음 수립된 것은 20세기이고, 파시즘과 전쟁의 수십년이 지나고 안정된 체제가 정립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다. '서구'의 역사는 결코 하나가 아니며, 단선적이지도 않다.

시민, 시민계급, 시민사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럽과 북미에서 그 역사의 전개가 국가별, 시대별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례로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가 편찬한 『19세기의 시민계급 I, II(Bürgertum im 19. Jahrhundert)』(Vandenhoeck & Ruprecht, 1995)에 실린 여러 국가 간 비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

탈리아 등에서 18~20세기 시민계급의 변천사는 매우 다르다. 여기서는 탐욕스런 부르주아가, 저기서는 혁명적 시토앵이, 또 다른 곳에서는 그제 도시의 거주자가, 또 다른 곳에서는 문화적 자의식을 가진 중산층이 ‘시민’의 이름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라는 개념도 확산되었다 사라지고 부활하기를 반복했다.

셋째, 시민사회의 이념과 개념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동아시아’의 고유함 또는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념의 측면을 보자면, 우리는 ‘서구의 시민 또는 시민사회 개념’을 조선, 일본, 중국의 지식인들이 도입하고 변형한 사례들을 알고 있지만 그 ‘서구 이념’은 하나가 아니다.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이 유럽 문명에서 평등한 인간이라는 관념을 접했을 때, 어떤 이는 계몽사상에서, 다른 이는 가톨릭 사상에서 ‘서구 이념’을 보았다. 시민사회의 이념에서도 에렌베르크(John Ehrenberg)의 저명한 『시민사회: 어느 이념의 비판적 역사(Civil Society: The Critical History of an Idea)』(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는 서구에서 시민사회 이념이 얼마나 다양한 지적 전통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려 준 바 있다.

개념관계 역시 실은 매우 복잡하다. 동아시아에서 ‘시민’, ‘공민’, ‘인민’, ‘국민’, ‘대중’, ‘군중’, ‘계급’ 등의 개념이 때론 경합하고 대체하며, 때론 중첩되고 연결되었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그러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키워드』를 보더라도 ‘Bourgeois’, ‘Class’, ‘Folk’, ‘Nations’, ‘Masses’, ‘Popular’ 등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의 얽힘이 곳곳에 서술되어 있다. 브루너, 콘체, 코젤렉이 편찬한 『역사적 기본개념』에 수록된 ‘시민(Bürger)’ 편에는 ‘시민’, ‘국가시민(Staatsbürger)’, ‘시민계급(Bürgertum)’이 함께 설명되어 있다. 유럽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사용된 ‘국가시민’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의 ‘시민’, ‘국민’, ‘공민’과 복잡하게 교차되는 의미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다양성과 복잡성만큼이나 ‘서구’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서구’와 ‘동아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고유함은 무엇이며,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가능케 하는 이 지역과 문명의 공통점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국의 시민운동은 전통문명을 공유하고 지리적으로 이웃인 나라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갖는 것일까? 아니면 전통문

명의 경계를 가로질러 시민과 시민사회의 공통점과 차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분별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서구와 동아시아를 비교하려는 연구자들 앞에 여러 무거운 학문적 숙제를 내려놓는다.

투고일: 2023년 3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31일

